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61 -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권리 보장!”
‘전문 수어통역 시스템 개선’ 공약 발표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수어 사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현실은 ‘참고 또 참고’
- 전문 수어통역 교육과정 마련, 수어통역센터 및 관공서 전문수어통역사 배치 등 ‘전문 수어통역 시스템 개선’ 공약... 2월 3일 ‘한국 수어의 날’ 맞아 소확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 공약61**



의료·법률 등 전문 수어통역 교육과정 마련 의료기관, 공공기관 전문수어통역사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6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문 수어통역 시스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은 3일,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는 ‘수어 사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수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어는 법으로 정해진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이지만, 각 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가 충분치 않아 일상에서 통역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찾아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은 약 4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전문수어통역 양성과정이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 1곳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청각장애인들은 아프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점을 지적하며, 관련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공약도 내놨다. 의료·법률 등 전문 수어통역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어통역센터 배치도 확대해 질병이나 코로나19 등 의료적 긴급 상황과 송사 등 법적 분쟁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기관을 이용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아프거나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따뜻한 손을 나누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수어통역센터 203개소가 운영 중이고, 약 1,083명의 소속 직원을 두고 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설명자료]

1. 전문 분야 수어통역 서비스 필요

- 2020년 12월 기준 청각장애인 395,789명
- 국립국어원 조사(2020년 한국 수어 활용 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수어통역에서 느끼는 불편으로 순서를 많이 기다림(21.6%), 통역사가 바뀔 때마다 설명을 다시 해야 함(16.7%) 등으로 나타남.
 - 관공, 금융, 의료, 법률 등의 영역에서 대다수 농인이 해당 기관을 이용할 때 주로 수어통역사와 동행하여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향후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은 물론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해당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강화하는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강구하여야 함을 시사.
 - 병원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우선으로 필요한 상황을 살펴보면, 진료할 때가 48.3% 응답하여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접수할 때 14.9%, 응급실에서 14.2%, 건강검진할 때 10.3%, 입원치료 중 6.4%, 기타 4%, 약국에서 0.8% 순으로 조사됨.
 - 법률 관련 의사소통 지원이 우선으로 필요한 상황으로는 사고 발생 시(교통사고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고소 및 고발 시 17%, 기타 8%, 재판 시 7%, 민사 합의 시 5.2% 순으로 나타남.

2. 전문 수어통역 양성과정 부재

- 수어통역지원센터 중앙지원본부 조사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전문수어통역 양성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지자체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 1곳에 불과했으며, 분야도 의료·법률에 국한되어 있었음.

<서울 의료·법률 통역사 양성과정 개요> (2021년 8월 기준)

2019.11.01.~2019.11.30.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주2회, 2시간) (총8회, 16시간)	27명	전문가양성과정 (연중사업)
2019.12.01.~2019.12.31.	법률통역사 양성과정(주2회, 2시간) (총8회, 16시간)	30명	전문가양성과정 (연중사업)
2020.11.01.~2020.11.30.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주2회, 2시간) (총8회, 16시간)	12명	전문가양성과정 (연중사업)
2021.10월 및 11월(예정)	의료통역사 및 법률통역사 양성과정 예정	10명(예정)	전문가양성과정 (연중사업)

※ 전국 수어통역센터 현황: 203개소 (2021.12 기준)

- 센터 소속 직원 1,083명 (정규직 963명, 계약직 120명)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19	32	20	23	5	5	5	26	1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광주	계
2	1	20	15	1	15	12	1	203